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1>민주·인권 도시, 제자리 찾기

12·3 계엄 이후 ‘5월 광주’ 주목
국가 정체성 재정립 시대적 요청
정치적 이해 맞물려 후순위 밀려
헌법 명문화 왜곡·편향 근절 필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내건 정책·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85%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 광주·전남은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5·18 정신 헌법 수록’, 지역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토균형발전’, ‘농어촌과 약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다섯 편의 기획 기사를 통해 ‘민주·인권·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가 지역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조명한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12·3 계엄 사태 극복의 원동력이자,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인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국가 정체성 재정립과 민주주의 근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시대적 요청이 커서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체성과 헌정 질서의 이념을 함축한 서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시작되는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4·19혁명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계승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 5월, 국가 권력에 맞서 헌법을 실질적으로 지켜낸 광주의 항쟁은 여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일깨운 역사적 전환점이다. 시민들이 군부의 폭압에 맞서 지켜낸 자유와 정의, 연대와 희생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

5·18은 이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동력이 됐으며, 6월 항쟁이 유혈 사태 없이 민주화로 이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5·18의 교훈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연속성과 발전은 결국 오월의 저항에서 시작됐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광주 서구 나눔캠페인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이기영 배우 등이 9일 서구청 광장에서 열린 ‘희망여름, 착!착!착! 기획사업 및 나눔캠페인’에서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37세대에 전달될 삼계탕, 전복죽 등 착한서구 시원한 여름나기 키트를 포장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으로 남아 있다.

오월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논의는 수십 년간 이어진 과제다.

1987년 개헌 당시부터 오월 단체와 시민사회, 학계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요구돼 왔지만 매번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임기 조정 등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과 얽히

며 후순위로 밀려났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도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처럼 반복되는 무산은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정치권의 무책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2·3 비

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은 다시 광장에 모이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고, 그 중심에는 5·18이 남긴 저항의 정신이 있었다. 헌법 개정 논의에서 오월 정신 수록은 더 이상 부차적인 사안이 아니다.

▶관련기사 3면 2면에 계속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서울고법 “헌법 84조 따른 조치” 불소추특권에 ‘재판 포함’ 해석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

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원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관련기사 4면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

2025 신안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일시 2025년 6월10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 인근 1004섬 분재공원 해안

바다는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약 80%가 서식하고 있지만 문명의 발달, 인구증가 등으로 해양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살아숨쉬는 청정 전남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바다살리기에 적극 관심과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